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556 |
|----------|------|

발의연월일 : 2025. 4. 3.

발 의 자 : 박주민 · 김문수 · 남인순
이용우 · 민병덕 · 김영환
김남근 · 염태영 · 임미애
이재정 · 박민규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 ·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내부 ·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집회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 또한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괴롭힘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롭힘소송”이란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2.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 또는 제출된

서면

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심리, 심의, 검토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또는 서면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라.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서면 또는
집회에서의 진술, 행위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행위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
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괴롭힘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및 재판) ①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
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로 인정되거나 소제기로 인한 기본권 행사
의 현저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심문기일
을 정하여 결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까지 증거조사를 포함한 본안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즉시항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각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반소) ①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소에 대한 판결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판결과 함께 선고되어야 한다.

제6조(가압류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기재된 당사자 및 피보전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가 행한 제2조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채권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3.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 전까지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한 특칙) 법원은 제3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